

# '96 공노대 공동임투, 성과와 과제

- 작은 고지를 넘겨받은 전투 없는 전쟁 -

노 항 래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국장)

평가는 주역들이 하는 것이다. 국외자는 다만 조언할 뿐. 이 글 역시 조언의 하나다.

평가의 첫째는 성과를 폄하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한계, 문제점을 감추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론 배격해야 한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기만성을 폭로했다'는 등, '산업별 조직화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등, 이런 류의 평가(?)는 유해하기까지 하다. 조언자가 자신의 몇몇 관념을 덧칠하면서 투쟁과정을 신비화하거나, 폄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역들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것은 '운동'과 아무 인연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더 이상 <공노대>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이번 공공부문 공동임투의 성과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물론 <공노대>가 세간에 널리 알려진 것은 하나의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성과는 오직 단결의 폭과 투쟁력의 크기의 확장여부로 표현될 뿐이다. 많은 이들이 그 조직으로 단결해야 함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실질의 성과이다.

3월 23일 장충단공원 집회에서부터, 6월 20일 새벽, 공공부문 5개사(한국통신공사, 서울지하철공사, 한국조폐공사, 지역의료보험노조연합, 부산교통공단) 공동 파업 돌입이 초읽기를 하던 시점까지, 공공부문 주요 사업장의 임금투쟁은 전 노동계와 노동행정당국에게 초미의 관심사였고, 막판에 이르러서는 언론과 국민의 관심사로까지 부상했다.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듯이 '막판 극적 타결'(?)로 이들의 교섭과 투쟁은 마무리되었다.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공노대 공동임투'였는가, '공공부문 5개사 공동임투'였는가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공노대는 13만여 조합원을 포괄하는 71개 노조의 대표자로 구성된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들의 회의체다. 올해 공공부문 공동임투는 이 71개 소속 노조가 함께 투쟁한 임투는 아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공공부문 5개사 공동임투"라고 말함이 옳다.

공공부문 공동임투는 공공부문 주요 사업장 간부들의 발의로, 이들 속에서 투쟁의 목표와 원칙이 제시되었다. 공노대는 각급 회의단위를 통해 5개사 공동투쟁을 추진하고, 5개사의 공동 임투전술에 '역사적인' 의의를 부여했다. 즉, 1) 해고자 복직, 2) 노조 전입자 축소방침 철회, 3) 직권중재 철폐, 4) 고용불안 해소, 5) 실질임금 쟁취, 6) 교사 및 공무원 단결권 쟁취 등 공노대의 6대 공동목표를 5개사 공동투쟁의 요구로 제기케 한 것이다. 여기에 임금구조개선, 공기업 경영개혁에 대한 노동조합의 통일된 목소리 등을 첨가할 경우, 그 동안 공공부문 노동조합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혁의 핵심 주제들은 모두다 포함하게 될 것이었다. 6대 공동목표로 5개사의 공동임투전술은 역사적인 의의를 부여받았다. 5개사 노조 공동투쟁이 바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일대 개혁을 요구하는 투쟁이며, 우리 사회 민주화를 향한 일보임을 확인한 것이다. 5개사 공동임투는 이 역사적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기도 하다.

교섭이 기업별로 나뉘어진 속에서도 각 기업단위 노조가 서로의 요구

를 통합하고, 더 나아가 공노대의 지휘아래 6대 공동목표와 공동투쟁 일정을 일치시켰다는 점, 이것이 이번 공동투쟁의 가장 큰 성과이고, 향후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물론, 전체 노동계에 매우 고무적인 투쟁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 6대 공동목표, 공공부문 노동정책 일대 개혁 요구

6대 목표를 뜯어보면, 직권중재, 고용불안, 교사 공무원 단결권 등 3개 사항은 법 개정 또는 국가정책과 관련된 사항이고(고용보장 요구의 경우, 정부당국의 공기업 민영화 분할 반대가 핵심이었음), 다른 세 가지 요구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실제로 교섭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이다. 곧 5개사가 공동으로 내건 3대 요구에 정책 및 제도적 요구인 3대 요구를 더한 것이 6대 공동목표였다.

공노대의 각급 회의가 이 6대 목표를 추진한 것은, 주요 5사의 투쟁을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혁을 향한 투쟁으로 평가한 것이기도 하다.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혁은 역사적 과제다. 이번 임투에서 당신들이 앞장서 싸워보라! 우리가 한 뜻으로 지지, 성원하겠노라!”

한편,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일대 개혁을 요구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투쟁은 5사 공동임투와 나누어서 또 다른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공노대는 올해 두 번의 대규모 집회를 조직했다. 10,000여 명이 모였던 3. 23 장충단공원 집회와 40,000여 명이 모였던 6. 2 보라매공원 집회가 그것이다. 장충단공원 집회는 공노대의 조직적 힘을 과시하고, 상반기 임금교섭을 앞두고 정부에게 공공부문 노동정책의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였다. 이와 비교해 보면 보라매공원 집회는 5사의 쟁의발생 결의를 근거로 5사 공동파업 의지를 높이기 위한 합법적인 실행행사였다. 3. 23 집회가 공공부문의 노동정책이 현재와 같은 통제방식으로 계속될 수 없음을 폭넓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참여 하에 확인한 집회였다면, 6. 2

집회는 쟁의 5사 중심으로 타결이나, 전면 파업이나에 대한 노동조합의 선택을 정책당국자에게 묻는 실행행사였다. 두 집회는 각각 높은 성과를 쌓았다. 3. 23 집회를 통해 광범위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결집을 확인했으며, 6. 2 집회는 정부당국으로 하여금 막판 타결을 강제해 냈다.

'96년도 임금교섭에서 5사의 행동적 교섭과 다른 많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평화적 교섭은 외양에서 크게 달랐으나, 공노대 71개 노조, 더 나아가 전체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쥐고 있는 노동정책의 현주소는 동일하다.

그런 만큼 '공노대 공동입투 평가'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일대 개혁을 요구한 공노대의 6대 요구가 어떻게 71개 소속 노조 조합원의 것으로 되었는가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성과의 측면과 함께 드러난 한계에 대해서도 주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노대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조합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서나 경험의 차이가 여전히 메워 지지 않고, 더구나 확대되기까지 한다는 점은 공노대가 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된 데는 행동적 교섭을 원칙으로 올해 임금투쟁을 진행했던 5개사의 사소한 과오도 없지 않다. 공노대를 71개 노조 대표자들의 회의체로 존중하기 보다는 5개사 공동투쟁의 명목적 수단으로 삼지는 않았는가.

## 공노대 소속 조직간 단결력은 담보

한편, 5개사 쟁의는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억압적 노동정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속에서 '행동적 교섭'은 지극히 정당하다. 시기집중, 공동집회, 공동 쟁의발생 신고, 공동파업 예고, 공동타결 등 일찍이 단사별 공동투쟁의 예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공동투쟁을 거침없이 이루어 낸 것이기도 하다. 6월 20일 새벽, 막판 타결을 강제해 낸 힘, 그것은 무엇보다 5사 공동 쟁의 예고이다. 노동정책 담당자들은 '공동파업 예고'가 허세인지, 사실인지 짚을 것이다. 그리고 '공동파업 예고'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타결에 이른 것이다. 5개사 조합원들의 약속의 승리이고, 단결력의 승리다.

그러나 이 승리를 '모조리 우리의 힘에 의해서'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올해 임금투쟁을 앞둔 시점에서 노정간 최대의 논란은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출범이었다. 총선 승리에 고무된 현 정부는 그 동안 제도권 밖에 머물도록 강제해 왔던 '재야 노동계'의 제도권 인입을 통해, 개혁 드라이브를 재현하면서 대선 가도를 열고자 했다. 물론 노림수가 있다. 투쟁력의 핵심을 거세하고, 순차하는 것. 자본진영의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를 법제화함으로써 조직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 그러나 중요한 (!) 것은 노림수가 아니라, 재야 노동계의 제도권 진입 그 자체다. 이것은 소위 '민주노조 진영'의 오랜(적게 잡아도 9년에 이르는) 요구였으며, 이 요구가 '저들에 의해서'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권력과 자본의 통제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9년여의 투쟁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5개사 공동파업이 허세가 아니라 '실제 상황'임이 확인된 티에정부당국의 선택은 명백한 것이었다. '직권중재 - 공권력 투입 - 노정간 일대 전면전'이나, 평화적 타결을 통한 대결의 유보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전자의 수순이 정부당국에게 '전투에서의 승리, 전쟁에서의 패배'를 가져다 줄 것임은 명백한 것이었다. 노개위가 파산하고, '군사정권보다 후퇴한 노동정책'을 비난하는 공세에 맞서야 했고, 광범위한 기층민중의 집권세력에 대한 본능적 거부를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공동투쟁 지지 표명 및 연대 투쟁 의지 천명이 이런 상황을 확인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고, 당시 시점에서 계속되고 있던 국회파행 - 한약분쟁에 더하여 국정수행능력을 비난받을 것이었고, 대선 가도에 또 다른 장애가 놓이는 것이었다. 정부당국은 이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정부당국은 결국 전투 없이 고지를 내놓았다. 자본진영과 언론집단의 도마에 오른 '해고자 부분 복직'을 노동조합의 투

쟁기세 앞에 내놓고 극적 타결을 수용한 것이다.

혹자는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내놓아진 전리품이라며 개탄하지만, 후퇴를 강제한 단결력을 폄하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이번 투쟁을 '96년 임투'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평가하는 것이 가장 부당하다. 공공부문 5사, 더 나아가 민주노총의 각 연맹이 거둔 올해 임투의 승리는 9년 투쟁의 성과물임을 투쟁의 주역들이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9년의 투쟁이 힘들었던 만큼 올해 봄, 투쟁의 성과물이 너무 작고 초라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그것이 기만이든, 노림수든, 허심탄회한 것이든, 열려진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라는 한 판 투쟁의 장에서 그 첫 고개를 넘어섰을 뿐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5사가 앞장섰던 '공노대 공동투쟁',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일대 개혁을 요구하는 전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투쟁이 이제 단지 시작되었을 뿐임을 확인해야 한다. 6대 공동투쟁 과제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지 않은가.

### **「노사개혁위원회」, 제1라운드를 치렀을 뿐**

5사 공동투쟁이 끝난 뒤부터 일부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 조직발전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조직은 꾸준히 발전해야 한다. 기업별 노조체제는 한국 노동운동의 극복대상이다.” 이런 주장은 항상 옳았고, 지금도 정당하다. 특히 94년 전지협 파업 이후, 그 해 말 <공노대> 출범 이후, 향후 한국 노동운동의 중요한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공공부문이 강력한 단일조직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점은 현단계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놓칠 수 없는 과제라는 점도 명백하다.

그러나 5사 공동투쟁이 '공공산별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었다거나, '5사 중심으로 공공부문 노동조합 조직을 전면 재편하자'는 주장은 명백한 주관일 뿐이다.

5사 공동투쟁은 완전한 기업별 노조의 투쟁이었다. 기업 단위 노조의 교섭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시기집중, 공동투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왜 조폐공사노조가 사활을 걸었던 '노조 전임자 축소 분쇄'가 쟁점화하지 못했는가. 교섭권이 각 사에 있는 조건에서, 조폐노조만의 절박한 요구인 전임자 축소가 타결의 쟁점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부문 5개사 노조의 명백한 승리를 패배라 할 수 있겠는가. 혹 5사 노조의 핵심 간부들 중 일부가 '96 공동임투의 성과를 공공 산별 조직 건설로 이어가자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간부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공공 산별 조직 건설이 조합원 대중 자신의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어느 독립투사가 이불 속에서 운동을 구상한 것이 곧 독립투쟁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산별 조직은 현재의 기업별 체제에서 대중적 합의, 중앙조직의 강력한 지도, 의식-조직-투쟁 내용의 전면 개편 없이 성취될 수 없다. 기업별 노조체제를 기초로 한 현재의 연맹체제가 재편의 대상이기도 하다. 특히 공공산별조직은 현재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분산성, 노동조합 자주성-민주성의 낮은 발전 정도에 비추어 더욱 지난한 전도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몇몇 기업별 조직의 공동행동으로 공공산별조직이 성취된다고 강변하거나, 심지어 "노동정책에 대한 투쟁적 태도의 정도에 따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공산별조직을 향한 전도를 어렵게 하는 주장일 뿐이다.

진부한 것이지만, 이번 공동투쟁을 통해서 공공부문 노동정책의 개혁이 여전한 과제라는 점, 단결하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더욱 폭넓은' 단결이 있어야 한다는 점, 이것이 <공노대> '출범부터' 과제였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진부한 과제가 더욱 절실했다. 이 절실한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공노대>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 공노대는 시급히 71개 소속 조직을 추스르고, 투쟁의 성과를 앞선 조직과 뒤에 선 조직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며, 하반기 공공부문 노동조합 전체의 공동투쟁 과제를 세우고(물론 6대 과제를 이어가는 것일 수 있다), 투쟁 대열을 넓혀야 한다. 투쟁 5사는 겸손한 모범으로 이 역사적 과제를 앞당겨 성취하는데 나서야 한다.

이번 투쟁을 통해서 확인한 <공노대>의 현재는 “대표자회의체라는 틀로는 투쟁의 기세를 담을 수 없었다”는 데 있지 않고, “대표자 회의체에 걸맞은 소속 조직의 단결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누구의 죄인가. 공공부문을 끊임없이 나누고, 민간부문과 다른 방식으로 통제하면서 단결을 막아온 행정당국의 ‘업적’이다. 이것을 넘고자 시작한 공노대였다. 지금 이 과제가 더욱 절실해지지 않았는가.

\* 한국통신공사노조의 지난해와 올해 투쟁은 그 큰 의미 못지 않게, 비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기억할 것이다. 95년 ‘통신주권 수호’, 올해 ‘PCS 사업자 선정 관련 통신 재벌독점 반대’ 투쟁! 이 투쟁은 한국경제의 대외의존성, 재벌집중을 통렬히 비판하고, 경제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묻는 우리사회 민주화의 핵심 투쟁이기도 하다. 그런데 흑이라도, 이 역사적인 투쟁이 임금교섭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기우가 사실이라면, 내년도 임투에서 한국통신노조가 ‘한국통신 분할·민영화 반대’를 또 한 번 교섭카드로 내놓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은 5만 조직, 민주노조의 위엄에 결코 합당하지 않다. **KLSI**



## 현장통신

- 노동자에게,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
- 병원노련 서울지역본부의 공동교섭투쟁

이번 **【현장통신】** 란에는 두 개의 글이 실렸다. 하나는 모범적인 산업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금속연맹 산하 대우조선노동조합 산업안전부의 글이고, 다른 하나는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전진을 거듭하고 있는 병원노련 서울지역본부의 공동교섭투쟁에 대한 평가문이다.

노동조합의 산업안전활동은 단순히 노동자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야기시키는 신경영전략에 대한 노동조합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작업중지권 확보투쟁은 구체적으로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병원노련 서울지역본부의 공동투쟁 평가문 역시 귀중한 글이다. 익히 알다시피 병원노련은 94년부터 기업별노조체제를 극복하고 산업별 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일환으로 공동교섭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진행된 공동교섭투쟁에 대해 투쟁주체 스스로 내리는 평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글을 보내준 이주호 사무차장이 3년간 교섭투쟁이 남긴 성과와 과제를 세심하게 정리하여 제기해 주어서 산별노조 건설과 공동교섭을 준비하는 노조간부들에게는 실천적 사색의 시간을 마련해 주리라 생각된다.